

(사)대한산란계협회		보 도 자 료		변창하는 산란산업 활기찬 농장 만족하는 소비자	
보도 시점 : 2026. 6. 8.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010-3723-1332)		
		담당자	전 무 김경두(010-3722-2822)		

“담합이라더니 ... 계란값 역대 최고가”

- 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AI·정책 요인 “인데... 농가 탓만 -
 - 소통 창구인 생산자단체 해산 추진 논란 -

최근 계란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주장해 온 ‘생산자단체 담합 책임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가 농가와 유통업계에 제공해 온 가격 참고정보가 계란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 이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협회의 가격 참고정보 제공이 중단된 지 1년이 넘은 현재, 계란 가격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마트에서는 30구 계란 가격이 9천 원을 넘고 구매 수량 제한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외식업계에서도 계란 사용을 줄이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담합 때문이었다면 가격이 내리고 수급이 안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는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담합이 아닌 공급 감소와 정책 요인에서 찾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소모성 질병에 따른 산란율 저하, 사육기준면적 확대 정책, 등급제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유통 현장에서는 가격 참고정보 중단 이후 산지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가격 참고정보 제공이 이미 중단된 상태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예정된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의 존립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허가 취소는 단순한 행정제재를 넘어 계란 생산 농가와의 협력·소통 창구를 없애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자신들이 계란값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낙인찍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과 대응 비용 마련을 위해 자발적인 모금 활동에도 나선 상태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가격 상승은 질병 발생, 생산량 감소, 정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대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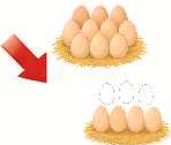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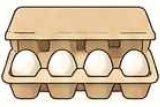
이어 “정부는 농가를 희생양으로 삼기보다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 안정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의문

**답합 때문이었다면
왜 가격은 더 올랐을까?**

업계가 보는 실제 가격 상승 요인

<p>고병원성 시 발생</p>  <p>대규모 살처분 → 생산량 급감</p>	<p>산란율 저하</p>  <p>소모성 질병(IB 등) 증가 → 산란율 감소</p>	<p>사육기준면적 확대</p>  <p>마리당 사육공간 확대 → 계란생산 감소</p>	<p>선별포장·등급제 시행</p>  <p>등급, 규제강화 → 생산비 증가</p>	<p>여름철 공급 감소</p>  <p>노계 증가, 폭염 → 생산성 감소</p>
---	--	--	---	---